

조진웅 논란이 남긴 진짜 질문

태평로

이 위 재

콘텐츠기획부장



이른바 ‘소년법 조진웅’ 논란을 지켜 보며 개운치 않았다.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남겨둔 채 흐지부지된 인상이다. 논란의 출발은 소년법 전력이었다. 그러나 반응의 온도를 갈랐던 것은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어느 편으로 분류되느냐”였다. 정치권이 가세해 사안을 진영 논리로 재단하는 동안, 한 인간의 삶 전체는 맥락 없이 흘러졌다. 조진웅이 어떤 인격체인지 알 리 없는 사람들이 무작정 두둔하거나, 무조건 난타하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씁쓸했다.

조진웅은 영화배우 초기에 건달이나 악역을 주로 맡았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조직폭력배, ‘불노의 윤리학’의 악덕 사채업자, ‘끝까지 간다’의 비리 경찰까지 폭력과 범죄의 경계에 선 인물들이 그의 얼굴과 겹쳐졌다. 이후 ‘암살’, ‘대장 김창수’에서 독립운동가를 연기하며 이미지가 달라졌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 흥분도 장군 유해 봉환 국민특사, 광복절 국기 맹세 낭독으로 이어지며 어느새 공적 상징에 가까운 위상으로 올라섰다.

이 스크린 속 변화가 논란을 영동하게 비틀었다. “과거 행위와 현재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연결돼야 하는가”라는 본질은 밀려났고, 위선과 배신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자리를 대신했다. 논의는 아이없는 정쟁(政爭)으로 비화했다.

이 사건이 던진 쟁점은 “소년법 전과를 공개해도 되느냐”가 아니다. 중대한 과거가 확인됐을 때, 그 사람의 현재와 이후를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가. 폭로 이후 즉각적 퇴출과 격리만이 유일한 해법인지, 다른 경로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노 쏟아졌지만 성찰은 없어 높아지는 소년법 재범률 심각 폭로와 퇴출… 사라진 중간지대 건설적 출구 없는지 질문해야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법 재범률은 12.6%로, 성인 재범률(4.1%)의 세 배가 넘는다. 20년 전(9.7%)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6.8%)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소년법이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라기보다, 사회가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책무에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본다. 교화와 복귀를 전제로 한 소년법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지도와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사회적 판단 역시 일관되지 않다. 어떤 과거는 “어린 시절의 실수”로 봉합

되고, 다른 전력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굳어진다. 그 경계를 가르는 요소는 죄질만이 아니다. 인지도, 이미지의 소비 방식, 정치·사회적 입지가 뒤섞여 작동한다.

조진웅이 먼저 과거를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면 평가가 바뀌었을 까.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소년법은 피해자와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으로 연결할지 사회적 기준이 안 보인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는 폭로와 퇴장 사이에 중간 지대가 거의 없다. 은퇴는 자발적 결단처럼 포장되지만, 선택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일 때가 많다. 해명과 반성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공격 책임으로 왜인할 수 있게 설계한 장치는 빈약하다. 과거를 청산하고 재할한 사람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 출구는 없을까. 공개 설명이나 검증 절차, 행적을 반영한 재평가 같은 대안적 접근으로 발전적 경로를 모색하지는 건 안이한 방책일까.

조진웅이란 이름은 머지않아 잊힐 것이다. 다만 이런 논란을 정리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비슷한 소동이 그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분노에는 과감하지만, 제도적 설계에는 무심한 경향이 있다. 과거를 덮자는 게 아니다. 과거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를 즉각 지워버리고, 미래를 몰수하는 게 합당한지, 질문해 볼 때가 됐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11]

모딜리아니의 마지막 2년

이탈리아 출신의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1884~1920)가 홀로 미술의 중심지 파리로 이주한 건 1906년, 20대 초입의 어린 나이였다. 비록 몰락했지만 한때 부유했던 유대인 집안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 미술에 매료됐다. 파리에서는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반항과 일탈을 훈장처럼 과시하던 몽마르트르를 드나들면서도, 고풍스러운 취향과 정돈된 삶을 유지하고자 했다.

단정한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모딜리아니는 점차 술과 환각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자신의 초기 작품들을 마구잡이로 내팔게지며 ‘더러운 부르주아 시절에 만든 유치한 장신구’라 폄훼했다. 파카소와 마티스의 시대에 르

네상스의 유산을 고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록 발작적인 자기 파괴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결핵이 악화되며 그의 몸과 정신을 잠식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당시 결핵은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연민과 동시에 기괴의 대상이었다.

모딜리아니는 생의 마지막 2년 동안 연인 잔 에뷔테른의 초상만 25점이 넘게 그렸다. 길게 늘어진 얼굴과 풍성한 붉은 머리카락, 굳게 다문 입술과 영원을 응시하는 듯 투명하고 공허한 눈은 고대 조각처럼 고요하며, 르네상스 회화처럼 안정적이다. 1918년, 따뜻한 남프랑스에서 딸이 태어났을 즈음 그의 건강은 잠시나마 회복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20년 그는 세상을 떠났고, 에뷔테른이 곧 뒤를 따랐다. 첫돌을 갓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노란 스웨터를 입은 잔 에뷔테른, 1918~19년, 캔버스에 유채, 100×64.7cm,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소장.

넉넉 나이에 고아가 된 아이는 훗날 미술사학자가 되어, 기억이 아닌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기록했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비상 계엄 사태는 검찰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이미 대부분 드러났다. 특검이 새로 밝혀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정도다. 수사 요원이 무려 238명 투입돼 6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발표 내용 중에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냈다고보다 정치적 평가를 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내용이 적힌 문건 등을 들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정을 덧붙인 것인데 그나마 상투적이다.

특검은 27명을 기소한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겐 내란 방조, 박 전 장관 등에겐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러졌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엄 선포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방조나 가담 혐의까지 씌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어떤 면에선 이들도 피해자다. 그런데도 특검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부분 기각됐다. 무리한 수사다.

국민연금 이사장직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김성주씨

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6년 총선에서 떨어지자 2017년 말 ‘낙하산’ 논란 속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2020년 임기 10개월 남기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무책임하게 중도 사퇴해 버렸다. 그의 지역구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병이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을 것이다.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저서 탈락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사람을 다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22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이 1322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연금공단 이사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런 막중한 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은 지난해 5000여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쪽으로 날렸고, 2022년에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왔다. 군이 드론을 날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드론사령관도 그렇게 주장했다.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도 특검은 한쪽으로 몰아갔다.

특검 발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면서 크게 다뤘다는 부분이다. 김 여사 측근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윤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내란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끝나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수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출범시킨 것이다.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특검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다.

정략의 최종 목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일 것이다. 따라서 특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민주당은 특검을 또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특검을 몇 번 하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세금을 낭비한 다음에 결국은 이번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인테 한 사람이 이사장 자리와 국회의원 출마를 번갈아가며 두 번씩 차지하고 있다. 마치 제 집 드나들 듯 한다. 김씨 임기는 2028년 말까지 3년인데 총선 일정상 이번에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사장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한지에서도 나올 정도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아직도 많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두가 어려운 과제다. 청년들은 노후에 자신들이 국민연금을 낸만큼 받을 수 있을지 불신이 높다. 청년만이 아니라 중년층도 최근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비율이 16%가 넘는 등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을 1% 포인트만 높여도 연금 고갈 시점을 5~10년 늦출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주 이사장에게 무슨 빛을 쬔갈래 이렇게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하나.

특검 중독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특검이 만능이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에는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 등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며 내년에도 특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검까지 할 일인지 모를 ‘관봉권 피지 분실’과 ‘꾸방 수사 외압’ 관련 상설 특검도 임명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을 놔두고 특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특검 만능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도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를 덮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놓고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했다. 민주당이 처리했던 특검법

은 처음부터 야당을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정치 특검’ 우리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라도 통일교 금품 수수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문제를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검과 다시 연장한다는 2차 특검은 권력이 아닌 야당을 겨냥한 비정상 특검이다. 여당이 관련된 ‘통일교 특검’이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가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특검 만능론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권이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에는 ‘특검 만능론’이라고 거부한다니 할 말을 잇는다.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한동훈 가족 한 짓 맞나? ... 국힘《당계 게이트》터졌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이호선 선임 당무감사위원장의 결기 판도라 상자 열어젖혔다 여론조작 피한 《가족 드루킹 사건》?



원색 댓글들 ... 저주에 가까운 악담들

국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의 실제 규명이 시작됐다. 한동훈 일가(一家) 연루 의혹 사건이다. 《당원게시판(당계) 게이트》란 4.10 총선 참패 다음 달인 2024년 5월부터 한동훈이 당 대표로 복귀해 활동했던 11월까지 반 년 간 한동훈 부부, 자녀, 장인장모, 모친 등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서 저지른 해당(害黨)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1,200여 건의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나경원 조경훈 정점식 의원, 원희룡 전 의원 등 한동훈의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인사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들이다.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더 이상 똥 싸지르지 말고/이 똥수 같은 인간 윤석열/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송장 xx들이/용산이 하는 모든 헛짓거리가 한 사람 죽이려는 거야/개종자 미친 개통령” “별 개 같은 꼴을 다보는 중/당 대표는 저런 무지랭이를 위에 두고 참 고생했네요” “영부인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강 무당 같다/미친 윤포라이/윤동신 개육갑 떨지 마세요/이런 18” “쌍쪽 들고 협박 받으면서도 선거를 위해 참았던 한동훈/속이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별 개 같은 꼴을 다 보는 중”

한동훈 가족과 동명어인 있는가

국힘 당무감사위(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가 공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작성자 진은정, 최영옥, 진형구는 모두 서울 강남 병 선거구 거주자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 병은 한동훈 가족이 살았던 선거구.

진은정은 한동훈의 부인, 최영옥은 장모, 진형구는 장인 이름과 같다. 또 한동훈의 딸 이름과 동일한 한지윤은 재외 국민 당원. 한동훈의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진은정 최영옥 진형구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모두 작성자들과 같은 사실도 밝혀졌다.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한지윤이라는 《당원》은 대통령 탄핵 가담 한동훈이 당 대표에서 축출된 직후인 24년 12월 16일에서 12월 19일 사이 모두 탈당했다.

이들이 실제 한동훈 일가인지, 아니면 동명어인인지, 추가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다만 이들이 한동훈 일가와 무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핵심은 당심 왜곡을 통한 자기발진적 여론 조작”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여당 대표와 그 가족들이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와 자당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② 그것을 측근들이 당심으로 포장해 언론에 공표하고 ③ 그렇게 만들어진 기사를 패널들이 다시 논평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문제의 본질이다.”

실제로 《가족 당심》을 증폭했던 상당수 언론사와 기자들, 방송에 출연한 친한동훈 성향 패널들은 한동훈 일가 명의 주장을 마치 일반 당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증폭시켜 자당 인사를 공격하고 한동훈을 띄웠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당원들 및 자유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동훈이 당 대표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도 실제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동훈도 입을 다물었다. 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갈등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자신 있을 때는 ‘의원님, 죄를 지시했습니까?’라고 시비를 걸던 한동훈이 유독 이 문제에서만만큼은 도망간다.”

한동훈을 변호하는 자들

문제가 불거진지 1년 만에 착수한 당무감사위의 진상규명을 친한계 세력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계 게이트》의 주체가 한동훈 일가로 확정된다면, 도대체 어떤 명분과 논리로 그걸 변호할 수 있나. 《가족 드루킹 사건》이라는 질타까지 나오는 심각한 당내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자는 자들이 국민을 향해 이재명 정권과 투쟁하자고 말할 수 있는가. 궤변으로 한동훈 일가를 지금도 변호하고 있는 자들. 유권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냥 덮고 가자고? 왜? 누구를 위해?

당내 일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이 문제를 덮고 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단언컨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당원과 자유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언론인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렇게 강조했다. “사태의 본질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을 동원해 대통령 내외와 동료 정치인에 대해 막말을 퍼부은 도의적·정치 윤리적 문제다. 그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왜 하필 이 시절이나, 또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들은 친한계 또는 일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가족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이다. 정치인과 그 가족이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비난한 것이 핵심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지적이다.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2월 1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8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